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월 5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상황으로 격화하고, 12월 3일 법제처가 협의대상 사회보장제도라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법제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12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청년활동 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결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는다며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강 대 강’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 복지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중앙정부는 권한강화에 나서며 복지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1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 신설·변경 복지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며 지자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 논란에도 돈줄을 쥐고 뜻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9월에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

호국 보훈

■ 6·25 참전 국가유공자 발굴

국가보훈처는 2015년 3월 7일 6·25 전쟁에 참가한 국가유공자 발굴 실적을 발표했다. 보훈처가 2014년 1월 이후 발표 시점까지 발굴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모두 2천800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6·25 참전용사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육·해·공군본부, 병무청,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참전 자료를 수집해 4만6천372명의 신상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6·25 전사 자료 155권을 조사해 217명의 개인 공적도 새롭게 발굴하고 이 가운데 유엔군 참전용사 5명을 포함한 11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훈처는 6월 5일에는 6·25 전쟁 당시 여군으로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16명을 찾아내 유공자 등록을 마친 사실을 공개했다. 보훈처가 2014년 초부터 진행해온 6·25 참전 유공자 발굴사업에서 여군이 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에 현역으로 참가한 여군은 육군 986명, 해군 75명, 공군 26명, 간호장교 664명 등 1천751명에 달한다.

6·25 참전 유공자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의료비 60% 감면, 주택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6·25 참전자 90만 명 가운데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42만 명에 달한다. 보훈처가 미등록 참전자 5만5천37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4만601명으로, 73.3%에 달했다. 생존자는 3천874명(7%)이었으며 본적지·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1만901명(19.7%)이나 됐다.

■ 6·25 유엔군 참전용사 방한



▲ 10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유엔군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만찬에서 이진원 국방부 국군의 날 기획단장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각 국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에도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이들의 헌신에 감사했다. 이들 가운데 4월 20일 한국에 온 영국인 6·25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88) 씨는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을 한국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보훈처의 초청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출신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80여 명과 함께 방한한 스피크먼 씨는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십자훈장을 한국에 기증했다.

그는 “메달(훈장)이 한국의 박물관에 전시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진해서 한국에 와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피크먼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임진강 유역 마량산(37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전쟁영웅이다. 당

시 24세로 왕립 스코틀랜드 수비대 소속 병사였던 그는 압도적으로 많은 중공군에 맞서 용맹무쌍한 수류탄 공격을 펼친 그의 진격을 저지했다. 이 같은 무훈으로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빅토리아십자훈장을 받았다.

5월 18일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 실종됐으나 아직 유해도 찾지 못한 미군 장병의 가족 약 50명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보훈처는 생존 중인 외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해왔으나 실종자 가족들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방한 기간 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참배, 6·25 전쟁 미군 실종 장병 추모식 참석, 판문점·민속촌 방문 등을 했다.

미군 실종 장병 추모식에서는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실종된 제임스 엘리엇 미 육군 중위의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쟁 때 실종된 미군 참전용사는 7천800여 명에 달한다.

10월 19일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초청으로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미국, 터키, 에티오피아, 호주, 태국 등 5개국 참전용사 1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기간 이들은 현충원, 경복궁, 전쟁기념관,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등을 둘러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참석하는 환영 오찬을 함께 했다.

■ 美 해병대박물관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인 2015년 7월 27일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콰티코시에 있는 해병대 박물관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미 해병대 이등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 리처드 캐리 장군 등 참전용사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 대표로는 최안근 보훈처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 기념비는 8각 모양에 약 2m 높이며 장진호 전투를 상징하는 '고토리의 별' 장식이 올려진다. 미 해병대는 장진호 전투 당시 눈보라가 그친 밤 밝은 별이 떴을 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은 것을 기념해 함경남도 장진군 고토리의 이름을 딴 별 장식을 배치로 달기 시작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에는 모두 60만 달러(약 7억원)가 소요된다. 보훈처는 이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한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 동안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제1해병사단 1만5천 명은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주민 10만 명이 무사히 피난할 수 있었다.

영하 30~40도 혹한의 날씨 속에 치러진 장진호 전투는 미군 전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됐다. 전투에 참가한 미군 해병 4천500명이 전사하고 7천500명이 부상했다.

■ 제2연평해전 13주년

정부는 2015년 6월 29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전사자 유족, 참수리 357정 승조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민구 장관은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인의 도발을 온 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밝혔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도, 기념행사에서 제2연평해전을 승전으로 규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제2연평해전 13주년인 6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2연평해전은 우리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런 승리의 역사 뒤에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필사즉생의 삶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는 제2연평해전을 그린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에 성공해 추모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6월 말 개봉된 연평해전은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국민적인 추모 열기 속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도 탄력을 받았다.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경우 상사로 추서 진급됐다. 이에 따라 한 중사는 유족 보상금 상향 조정을 포함해 상사 전사자의 예우를 받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해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고 한상국 상사의 전사일을 제2연평해전 당일인 2002년 6월 29일에서 그의 시신을 인양한 같은 해 8월 9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정의 조타장이었던 고 한상국 상사는 고속정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 1개월여 만에 인양됐다. 해전 당일 고 한상국 상사는 하사였으며 국방부는 해전 직후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제급 특진 추서로 그의 계급을 중사로 높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고 한상국 상사가 해전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둔 진급 예정자였던 점을 들어 그의 상사 진급 추서를 요구해왔다.

9월 21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추모식과 합동안장식이 열렸다. 이로써 제2연평해전 6용사는 전사한지 13년 만에 한 자리에서 영면하게 됐다.

■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정부는 2015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

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승조원, 정부 주요 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정부는 국가 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란다"며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라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천안함 5주기 추모 및 부산 범시민 나라 사랑결의대회'가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고 천안함 46용사의 출신 학교에서는 추모식과 사진전 등이 열렸다.

해군은 이날 전 장병이 참가하는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부대 별로 열고 결의문 낭독, 천안함 추모식 시청, 묵념, 전투구보, 행군 등을 했다. 또 해상기동훈련, 긴급출항훈련, 적 도발 대비 대응절차 훈련 등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정부는 2015년 11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원순 서울시장,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 등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를 포함한 4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이름을 언급하며 애도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도발 기념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추모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방위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독립운동 보훈

■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을 앞두고 구한말 의병운동을 한 곽한소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7명을 발굴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유족에게 포상했다.

곽한소 선생은 구한말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제자

로, 스승이 작성한 항일 격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성토하는 글의 초안을 썼다. 충남·전북 지역에서 의병운동에 투신한 선생은 의병의 잇단 패전에도 군자금을 모아 무기를 사들이고 진여세력을 규합하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보훈처는 해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에 포상해왔다. 이번에 발굴된 67명을 포함해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인물은 모두 1만4천264명이다.

보훈처는 2015년 3·1절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강익록 선생을 비롯한 178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했다. 강익록 선생은 1924년 12월 대한통의부 소위 이진무와 함께 평안북도 선천군 남면의 삼봉주재소를 공격해 일본인 순사에게 중상을 입히고 창고를 불태우는 등 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16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번에 발굴된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132명은 건국훈장을 받았고 23명은 건국포장, 31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입주했던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의 임시정부 청사가 2015년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재개관했다. 독립기념관과 후난성 및 창사시 정부는 이날 창사시 차오쥙(潮宗)가 난무(楠木)청 6호에 있는 창사 임시정부 옛터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2009년 5월 중국 당국이 공개했던 창사 임정 청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내부 설비와 전사자료 등을 복원하고 서툰 한국어 안내문과 자료 설명을 정비하는 등 리모델링 작업을 거쳤다.

청사는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虹口)공원 폭탄 의거 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혹독해지자 임시정부가 이를 피해 1937~38년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9월 4일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재개관했다. 이곳은 임시정부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가장 오래 사용한 건물이다. 상하이 황푸(黃浦)로 마당로에 있는 이 건물은 3층짜리 벽돌 건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임정 요인 사무실, 사료 전시관 등을 갖췄다.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 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에 합의했고 국가보훈처는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2015년 6월 임정 전시설계 최종안을 내렸으며 중국 측은 이에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롭게 단장한 임시정부 청사가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평화 통일을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방식 유지

보훈처는 2015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나흘 앞둔 5월 14일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보훈처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과 같이 공식 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전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으로 불러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 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5·18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도 비판에 가세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 재향군인회, 회장 비리 의혹으로 내분

보훈처가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가 조남풍 회장의 비리 의혹으로 내분에 휘말렸다. 2015년 4월 당선된 조 회장이 선거 기간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대규모 금품을 뿌렸고 향군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인사의 측근을 요직에 기용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24일에는 향군 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돼 조 회장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조 회장의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훈처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향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특별감사에서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인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1년 향군 유커어사업단장을 하며 4개 상

장사 BW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향군에 7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인물이다.

조 씨는 경영본부장에 오르자마자 최모 씨의 소송에서 향군이 회수한 채권 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조 회장이 향군 인사 규정을 어기고 측근 25명을 향군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한 다음 대부분 재임용해 사실상 보훈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계획에도 없던 ‘청년단’을 수천만원을 들여 조직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다.

급기야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향군 직원들은 ‘향군 정상화 모임’을 결성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1월 말 조 회장을 5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향군 회장의 구속은 향군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향군 시·도 회장들은 12월 조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 향군 내분 사태는 연말까지 계속됐다.

노인·여성·청소년

노인

■ 노인 10명 중 3명은 일한다…“외롭고, 아프고, 힘든 노년”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비 항목 중 주거 관련 비용

